

1987년 KAL기 폭파, 1996년 휴전선 ‘총풍’, 2010년 천안함

‘북풍’ 조작 전력을 기억하라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할 것 같다. 이어서 이명박의 대국민 담화와 국방부의 대북 성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방선거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이어질 이런 일정들이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관련 기사 2면)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맞서 국민은 정부와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친북 이적 행위’라는 ‘북풍’ 선동이 요란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정권 심판론을 가리고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어뢰설 등은 억측과 소설”이라고 말한 유시민을 ‘친북’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한심하게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기와 안보가 해이해져 이런 일이 생겼다’고 대응하며 안보 논리에 말려들고 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소설가 이외수도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할 정도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얼마 전 증거로 제시한 것은 인양된 천안함에서 발견된 화약 흔적이었다. 그러나 발견된 화약 흔적은 고작 0.00000000146그램밖에 안됐다. 더구나 화약 흔적이 발견된 지역은 오랫동안 한국 해군이 사격 훈련을 해 온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방장관 김태영은 “결정적인 증거물로 단언할 수 없다”며 얼버무렸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번에는 어뢰 프로펠러 파편으로 추정되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황 증거상 북한이 한 게 뻔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듯하다.

정황

그러나 ‘심청이 신발도 찾을 수 없다’는 바다 밑바닥에서 나온 파편 하나를 ‘결정적 증거’로 보긴 힘들다. 정황을 봐도 북한 어뢰설은 믿기지가 않는다.

북한이 어떻게 인공위성, 레이더, 음향탐지기 등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뚫고 들어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천안함을 두 동강 냈는지 설명이 안 된다.

어뢰가 폭발했는데 왜 물기둥이 치솟지 않았고 고막을 다치거나 화상을 입은



5월 19일 기자들에게 천안함 일부만 공개하는 군부 결과를 정해 놓고 사실을 꺾어 맞춘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사람이 없으며 화염과 열기의 흔적도 없는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중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신상철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등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 어뢰설의 근거 부족을 조목조목 반박해 왔다.

반대로 해군이 사고 발생 직후에 실종자 가족에게 해도를 놓고 “좌초”라고 설명한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면서 좌초설

이 힘을 얻고 있다.

더구나 민군합동조사단이 ‘폭발로 사라졌다’고 했던 천안함의 가스터빈실이 곧 인양될 것이라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어뢰설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숨겨온 군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 교신기록,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만 공개해도 진실은 대강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군부는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군부가 침몰 당시의 TOD 영상을 숨겨놓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입을 가린 다음,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사실을 꺾어 맞춰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설득력과 타당성이 너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과 진실 은폐에 기반을 둔 ‘북풍’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북한 주적 개념 부활’을 운운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다.

전지윤

그리스 구제금융은 부자들을 위한 수혈

유럽연합과 IMF는 그리스 노동자들을 더욱 강도 높게 공격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 자본가들에게는 1조 달러를 더 퍼 주려 한다.

유럽연합과 IMF가 제공하기로 한 “구제금융”은 그리스 민중을 위한 돈이 아니다. 구제금융의 용도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그리스 등의 디폴트 위험 국가에 돈을 빌려 준 은행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오바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단호한 행

동”을 주문했다.

〈뉴욕 타임스〉는 “유럽의 국가채무 위기가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후에 전개된 것과 같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은 그리스 등의 국가에 대한 보증을 서는 데 공공 수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2008년의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긴축에 혈안이 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은행에 퍼 줄 돈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구제금융 기금 1조 달러는 단 한 푼도 공짜로 지급되지 않는다.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는 임금을 삭감하고 공공서비스를 처참한 수준으로 축소하며 은퇴 연령을 최고 14년 연장하는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반격

그리스 민중이 저항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그들의 저항이 유럽 전체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관련 기사 3면)

스페인·포르투갈 정부는 금융 투기꾼들의 다음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긴축이 확산되는 것과 더불어 반격의 가능성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IMF의 손에 고통 받고 있는 루마니아 노동자들은 대중 파업을 논의하는 중이다.

그리스의 불길한 앞날을 예고하듯 루마니아 대통령 트라이안 바세스쿠는 올 6월부터 공공부문 임금이 25퍼센트 삭감될 것이고 연금과 실업수당도 15퍼센트 깎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손꼽히는 룩셈부르크의 연립정부는 최근 긴축 계획을 둘러싼 논란으로 붕괴 직전까지 갔다.

▶ 2 면으로 이어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쟁

“보험료 인상” VS

“정부 압박할 대중 투쟁 ▶ 10 ~ 11면

《강은 살아 있다》 저자 최병목 목사 인터뷰

정부의 4대강

거짓말을 들춰내다 ▶ 14면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기고

〈조선일보〉식 “괴담”을

반박한다 ▶ 11면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대안 논의③

에보 모랄레스와

볼리비아 민중의회 ▶ 12면



세상을 읽는

“세계 어느 정보보다 열심히 하겠다”

이명박, 안 그래도 되는데

이재교 : “[조전혁 후원 콘서트에] 가수들이 오지 않은 것을 ... 분석해 보니 특정세력이 움직였다”

정몽준 : “천안함이란 똑같은”

콘서트가 망한 것도 북한 소행?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

‘색검’총장 김준규

“여자는 뉴스를 바퀴벌레보다 싫어해요. ... 여자는 사실은 아는 게 쥐뿔도 없어요”

한나라당이 만든 홍보 동영상 ‘선거탐구생활’에서

“요즘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서로 ‘너 어디 아파트 사니?’ 물어보며 가정환경 다 파악합니다. 아이들이 영악해서,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 해도 새롭게 밝혀지는 게 없어요”

경기도의원 이승철

“노자 좋구나 오초동남 너른 물에 오고가는 상고선은 ... 에헤에헤 ~ 에헤야~”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5·18 기념식에 연주하려던 ‘방아타령’

“휴일인 일요일엔 문이 닫혀 있고 사람도 없는 것이 당연한데 일요일에 와서 아무도 없는 건물을 보고는 광우병대책회의가 소멸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조선일보] 기자의 양심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내게도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인터뷰하고 끝을 때 ‘이 통화 내용은 녹음돼 있고 [조선일보] 스타일대로 나가면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실리지 않았다”

촛불 유모차부대 ‘은석현암’

“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소설을 써서 밥 먹고 살았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딱 한 마디밖에 할 수가 없다. 졌다.”

소설가 이외수를 절리게 한 우파들의 ‘천안함 소설’

지배자들의 “외부 위협” 조작 역사

‘외부의 적’의 위협을 조작하거나 과장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1898년 쿠바 아바나 항에 정박해 있던 미국 전함 메인호가 갑자기 폭발하며 2백66명이 사망했다. 당시 극우신문 <더 월드>는 스페인을 배후로 지목하며 “메인호를 기억하라! 스페인을 지옥으로!” 하고 선동했다.

미국은 곧 스페인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1976년에 메인호가 내부 폭발로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1964년 통킹만 사건도 유명하다. 미국 구축함이 북베트남군의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으로 무고한 베트남 민중 2백만 명이 죽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는 1995년에 그 사건이 미국의 자작극이었다고 고백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북풍’ 어게인? 20여년 전과 너무 유사한 정권과 보수언론의 ‘북풍’ 물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총풍’

한국 지배자들의 ‘북풍’ 조작과 과장 역사도 오래됐다.

대표적인 사건은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KAL기 폭파 사건이다. 1백15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북한의 테러로 규정됐고 테러 용의자 김현희는 선거 하루 전날 압송돼 왔다.

이 사건은 노태우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와 정보가 은폐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의혹들은 아직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96년에는 총선을 며칠 앞두고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갑자기 남쪽을 향해 사격하는 일(이른바 ‘총풍’)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현 한나라당)

의 은밀한 요청에 북한 정권이 응답해 일어난 일이었음이 1997년 말에 밝혀졌다.

선거를 앞두고 간첩단 사건 등을 터뜨리는 것도 지배자들의 단골 수법 중 하나였다.

이제 이명박은 천안함 사고를 이용해 ‘북풍’을 일으켜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정부 비판 세력들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

전지윤

정부 비판은 무조건 ‘불법’

5월 7일, 경찰은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한국엔 여전히 국가보안법 있다”며 신문 1면 기사, “안보위기”는 사기다”도 문제 삼았다.

5월 10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단체 활동가 세 명이 전원 연행됐다. “1인 시위라 해도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일반적인 집회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그뿐 아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나아가 1년 전 집회 참가자에게서 무더기로 마구잡이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심지어는 허가한 집회 주

최자들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프랭크 라퀴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 실태를 조사하려고 방한한 것 때문에 마지못해 5월 7일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집회 개최 여부 등으로’ 조사할 게 있다며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간사 등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게다가 국정원은 유엔특별보호관을 미행하기까지 했다. 유엔특별보호관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가라면 내 활동을 특별히 제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5·18 민주영령에 대한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것도 막았다. “상설무대의 당초 설치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5.18 민주영령에 대한] 추모를 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조전혁 후원 콘서트’나 천안함 관련 행사는 모두 허가했다. 우파의 친정부 행사는 허가하면서 진보적 단체의 정부 비판 행사만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물이’를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모조리 차단하는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나지현

무기구매비는 긴축 대상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그리스 정부에 임금과 연금 삭감·복지 축소 등 혹독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임새를 줄여서 빚을 갚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임 정부가 체결한 수십억 유로나 되는 무기 구매 계획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노동자·민중을 위해 쓸 돈은 줄여야 하지만, 살상 무기에 쓸 돈은 늘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고통에 빠진 그리스 노동자들을 옆에서 무기 팔아먹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리스가 사야 하는 호위함의 가격은 3조 5천억 원이 넘는다. 이 외에 헬리콥터, 전투기, 잠수함 등도 사라고 압박한다.

이것이 지배자들의 진짜 모습이다.

박건희

파병 한국군은 아프간 민중의 적

이명박 정부가 7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앞두고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파병부대 ‘아세나’(다리어(語)로 친구, 동료라는 뜻)를 창설했다. 나아가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까지 재파병 명분을 포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최근 나토 본부를 방문한 외교통상부장관 유영환은 나토 주재 28개 회원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에 한국 정부가 세운 대응 방침을 지지·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미국과 나토를 주축으로 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테러를 척결해 국제사회의 안보를 증진시킨다



제국주의의 ‘아세나[동료]인 파병군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적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토와 한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정책은 세계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근 탈레반이 점령군, 부역자, 정부 관료들에 대공세를 시작했고 5월 초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압절

로 점령군 사망자가 늘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모두 카르자이 정부와 점령군 때문이라고 믿는다. 올해 아프가니스탄은 양귀비 재배가 흉작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양귀비 재배를 가로막으려던 정부와 점령군 때문에 흉작이 왔다고 생각한다. 사실, 갑자기 흉작이었어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정부와 점령군 탓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만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부와 점령군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이 팽배하다.

점령군이 2월부터 남부 탈레반 거점 지역에서 시작한 소탕작전은 실패하고 있다. 소탕 작

전의 성과라고 자랑했던 남부 마르자 지역에서는 미군을 못 믿겠다며 피난 행렬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우리는 정부가 얼마나 노동계급 자식들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지켜봤다. 그런 정부가 반성은커녕 또 다른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며 재파병의 정당성 운운하다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하겠지만 그 때문에 생길 모든 재앙은 온전히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김덕엽

지원은 줄이면서 애만 날으라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축소로 엄마·아빠 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3개월)~만 12세 아이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백 퍼센트 이내 가정 가운데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본시간(두 시간) 1만 원의 이용요금 중 가구소득에 따라 8천 원에서 2천 원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2백24억 원을 집행했으나 올해는 71억 원이 삭감된 1백53억 원을 책정했다. 그래서 서울은 지난해보다 20억 원가량 삭감됐고 대전은 절반 이상 삭감됐다.

이용시간은 80시간에서 40시간(하루 두 시간)으로 반토막 났다. 지금은 예산이 거의 소진돼 그나마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기 일쑤다.

병설유치원은 오후 4시 30분이면 마치는데 하루 두 시간 지원으로는 야근은 말할 것도 없이 정상 근무 시간도 채우기 어렵다. 두 시간 이후에는 시간 당 5천 원을 온전히 다 지불해야 한다.

“출산 후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돌보미 비용을 지원 받지 못할 경우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 엄마는 “나에게 돌보미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고 했다.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이번 지원 삭감이 절망적이기만 하다.

“복지예산은 줄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예산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복지예산을 끌어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높고 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출산을 했던 간 낭패를 각오해야 한다.

신미정

▶1 면에서 이어짐

지난 몇 달 동안 간신히 유지돼 왔던 벨기에 연립정부는 최근 와해됐다.

구제금융 기금으로 1조 달러가 과연 충분할지도 의문이다. 지난 화요일(5월 11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1면 헤드라인은 “유럽연합 구제금융 발표에 증시 급등”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8시 20분에 <파이낸셜 타임스> 온라인 판은 “월요일(5월 10일)의 극적인 랠리는 아시아 증시가 유럽 증시 한테서 바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유로화가 흔들리는 바람에 힘을 잃은 듯하다”고 보도했다.

유로화 사용 국가들이 빌려야 할 돈은 올 한 해에만 1조 2천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경제 성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부자들은 발작을 일으키는 자신들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려고 끊임없는 수혈을 요구할 것이다. 다름아닌 노동자들의 피로 말이다.

은행 구제에 들어간 비용을 누가 치를 것인지를 둘러싼 전투가 곳곳에서 불붙고 있다.

출처 영국외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번역 천경록

그리스 노동자들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사라 로빈슨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그리스 정부와 IMF의 긴축 조치에 맞선 대중 저항이 국제 지배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노동자들이 승리하려면 투쟁이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 지배계급, 나아가 전 세계 지배계급의 힘에 맞서고 있다. 만약 이들의 투쟁이 사장들을 한발 물러서게 한다면 전 유럽의 지배계급이 위기에 빠질 것이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싸움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에게는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힘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무기한 총파업으로 산업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직장을 점거하고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국가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는 물음을 제기한다.

이는 단순히 생산을 멈춤으로써 정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의 직장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노동자들은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권력과 민주주의를 창조할 수 있다.

파업 조율 위원회

총파업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노동자들은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고도로 조직화해야 한다.

파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그리고 파업 참가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식량을 배급하고 운송을 조직하는 등의 매우 실질적인 일들이 처리돼야 한다.

노동자, 실업자, 연금 생활자, 학생 등이 참가하는 파업 조율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파업 조율 위원회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의논해야 한다.

이 과정은 노동자들을 변화시킨다.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등 우리를 분열시키는 낡고 억압적인 사상들은 사람들이 투쟁으로 하나되는 과정에서 녹아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계 지배계급이 하루 만에 무릎 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 자신감이야말로 투쟁을 전진시키는 열쇠다.

그리스에서는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발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수백만 명이 국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급진화하고 있다.

투쟁은 여러 번 고비를 맞이할 것이다. 가령 그리스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 동결은 그대로 추진하는 대신 정년 연장 혹은 부가세 인상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것이다: 정부가 긴축 정책을 모두 철회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얻어낸 양보에 만족할 것인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적 조직과 지도가 사활적으로 중요해진다. 노동자 투쟁이 혁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었지만 지도력이 부재한 탓에 기회를 날려버린 경우가 그동안 너무 많았다.

2001년에 아르헨티나 정부를 전복했던 대중 반란은 오늘날의 그리스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촉발됐다. 아르헨티나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 대가로 긴축을 요구받았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공지출에서 90억 달러를 추가로 삭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여러 차례 긴축 조치를 감내해 온 노동자들은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제부 장관이 사임했고 데 라 루아 대통



5월 13일 그리스 의회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5월 13일 그리스 의회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령은 해외로 도망쳤다. 바로 며칠 뒤에는 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해 데 라 루아의 후임자인 로드리게스 사야를 쫓아냈다.

아르헨티나 민중은 시위를 조율하기 위해 민중회의를 조직했고, 단 몇 주 사이에 대통령 넷을 갈아치웠다.

2002년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국 IMF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IMF 차관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탕감됐다. 대중 운동이 혁명적 상황을 조성한 끝에 상당한 승리를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를 전복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기반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대중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사이를 지지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불행히도 민중회의는 작업장에 기반

을 두고 있지도 않았고, 책임 있는 대표자들의 기구도 아니었다.

주요 공장, 사무실, 공공기관 등에 전투적 노동자 대표들(동료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이 있다면 이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전투에 합류시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노조 지도부의 보수적 책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다.

단호한 지도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다고 뭐가 바뀔까’ 하는 회의에 빠지기 쉽고 운동도 비틀거린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지배계급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지배계급의 자신감도 중요한 변수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각국 정부에 그들이 양보하기보다 긴축을 밀어붙였을 때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위협해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는 투쟁이 쉽게 확산할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상황을 만들어 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배계급은 불안에 떨고 있다.

대중 투쟁은 그리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둘러싼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배계급은 현재 취약하다. 어쩌면 그들은 그리스의 위기를 해결하는(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보전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의 부채를 전액 탕감해주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지도 모른다.

나아가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IMF의 긴축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노동자들에게 조직과 자신감, 그리고 전투적 행동이 필요하다.

번역 천경록

“무자비한 긴축”에 맞서 싸울 채비를 하는 스페인 노동자들

루케 스토바르트

유럽의 계급 전쟁에 스페인 노동자들이 곧 합류할 듯하다.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6월 8일 긴축 정책에 맞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스페인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 중 하나다. 지난 몇 년 사이 1백5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풀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스페인 사회당 정부의 초기 대응은 다른 나라 정부들과 달랐다. 사파테로 총리는 “절대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공공근로 사업을 벌여 실직 상태에 있던 건설 노동자 50만 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페인 사회당은 노동자들에 맞서 고용주들을 편든 오랜 전력이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집권당이었을 때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오늘날 스페인의 청년 노동자들은 다섯 명 중 네 명이 기간제 노동자로서 평생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파테로는 전임 우파 정부에 맞선 대대적 시위 덕분에 집권했다. 그래서인지

최근까지는 노동계급과 정권 대결을 피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스페인은 주요 경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침체에서 빠져나왔고, 높은 실업률 탓에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 투기꾼들은 그리스, 포르투갈과 더불어 스페인의 국가 부도 가능성에도 돈을 걸어 왔다. 그들은 스페인 기업주들과 한목소리로 무자비한 긴축과 퇴직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가 한 명은 지금 상황을 “전쟁”에 비유했다. 선출되지 않은 이 자들이, 그것도 경제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정부더러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

오바마도 사파테로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한 행동”을 주문하면서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탤다. 오바마와 통화하고 한 시간 뒤에 사파테로는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긴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임금을 5퍼센트 삭감하고 연금과 장애인 급여를 축소하는 조처도 포함된다. 사파테로 정부는 이미 빈곤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부가세 인상을 단행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인데도 2009년 최고경영자들의 보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현 상황은 조직 노동자들의 힘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 노총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조 연맹 지도자들은 사파테로를 동맹으로 취급해 왔다. 우파는 사파테로보다 더할 것이라면서 말이다. 실질적인 파업을 벌인 곳은 지역 단위 노조들뿐이었다.

그러나 긴축안이 발표되자 노조 연맹 지도자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노조 지도자들은 6월에 공공부문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비록 파업 개시일이 당초 일정보다 6일 늦춰지기는 했지만).

좌파연합을 비롯한 일부 세력은 이번 파업을 총파업으로 확대하고자 압력을 넣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노동자들이 긴축을 막아내려면 총파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여전히 퇴직금 축소 문제를 두고 고용주들과 협상하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싸울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이유다.

스페인 사람들의 3분의 2는 사파테로의 긴축안을 반대한다. 그래서 사파테로의 인기도 추락했다.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는다. 스페인 민

중과 지배자들 사이에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간극이 더 큰 투쟁을 촉발하길 기대해 본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천경록



“G20의 위기 해결책은 하구적”

얼마 전 G20 정상회의의 의제들을 정리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장호중 기자에게 G20 정상회의의 의제와 운동 진영의 대응을 말한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명해 주세요.

크게 여섯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위기 대처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경제 위기를 낳은 책임이 있는 금융권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바마는 구제금융 환수 방안으로 은행세를 부과하거나 금융자본의 초과이윤에 금융활동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캐나다나 브라질은 자국 은행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노동계나 NGO들은 금융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같은 대안을 제시해 왔죠.

다음으로는 IMF 개혁 문제가 있습니다. IMF의 구실뿐 아니라 그동안 미국 재무부 구실을 해 온 IMF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위기 이후 체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들에게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미국과 중국 관계 문제입니다. 미국이 계속 적자를 보며 중국 제품을 사들이고 중국이 그 돈으로 다시 미국 채권을 사들여 자본을 공급하는 적자국-흑자국 구조가 국제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미국 경제 체질이 악화되면 중국이나 한국 같은 수출국도 문제가 생겨 지구적 규모의 경기 후퇴를 낳으니까요. 그들은 이런 구조가 미국 자산시장 거품의 원천이 됐다고 여깁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너희들한테도 안 좋으니 수출 중심으로 가려고만 하지 말라’며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을 넣습니다. 다른 하나는 IMF 개입 문제입니다. 각국의 위기 이후 체제 방안을 IMF가 평가하도록 했거든요. 당연히 일부 국가들이 반발하겠죠. 개혁의 대상이 개혁 내용을 평가하겠다는 거요.

넷째, 일자리와 사회보장 문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가 되려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회의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언급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국제 노동계는 경제 위기 전에는 “고용 없는 성장”, 경제 위기 뒤에는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중국은 UN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NGO 중에는 G20이 뭔가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출구전략 문제인데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알아서 긴축 정책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서울 회의 전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의 의제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까요?

금융 규제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IMF가 2차 초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사진: AP

G20 회의는 “무장” 회의? 5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경찰특공대가 G20정상회의를 대비한 대테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어떤 수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NGO들은 토빈세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자본의 이동 자체를 G20이 규제하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IMF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금융 규제안을 둘러싼 합의 결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것이고 사후대책 정도가 될 듯합니다.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규제하는 내용도 오바마가 미국에서 통과시킨 금융개혁 수준에도 — 이것도 약한 건데 — 못 미칠 겁니다.

IMF 개혁은 그들이 이미 합의한 세계은행 개혁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미국의 지배력은 그대로 두고 유럽의 투표권 일부를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에 조금씩 나눠 주는 거죠. 실제로 개혁이 이뤄지려면 최소한 50퍼센트 이상 투표권이 개도국들이 이전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위기 이후 체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고요. 일자리와 사회보장 문제는 이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IMF가 그동안 개도국 등에 요구해 온 구조조정 프로그램들

이 있으니까요.

출구전략은 이미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각국이 알아서 시행 시기를 판단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아직은 경기부양이 필요한 것 같다는 단서는 달렸지만 말이지.

금융 규제를 해결하려면 G20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 운동이 G20 회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주노총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로 삼기 위해 테러와 반대 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별법을 “18대 국회 들어서 본 것 중 가장 부끄러운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

겠다’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켜’라고 답변해 사실상 G20 경호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특별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훨씬 넘어서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5조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호안전구역,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판단해 스스로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정희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이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30분 전에 의원실에 특별법 수정안을 제출하고서는 여야 수석 부대표간의 합의를 의미하는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허위로 날조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했으니 심사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도 된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써가면서 오늘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작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표발의를 한 한나라당 의원 김정훈이 아니라 경호처가 “법안 내용을

먼저 G20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해야 합니다. 또 G20이 위기 해결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WTO에 대해서도 개입이나, 반대나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나마 WTO는 비판적 개입을 위한 수단이 조금이나마 있었습니다. 그러나 G20에는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활용이나 반대나 하는 구도로 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G20의 위기 해결책이 허구적이라고 비판하고 노동자 민중 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금융 문제가 제기된 것에는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획기적인 방식이 필요하겠죠.

물론 G20에 대한 비판은 동의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 기껏해야 ‘지속 가능한’ 금융 착취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니까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기를 불러 온 당사자 중 하나인 IMF에 위기 이후 체제에 대한 평가를 맡기겠다는 것도 그렇구요. 말로만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 얘기했지 구체적이고 진지한 실행 약속은 없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최대한 광범한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6월에는 부산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모이는 회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겠죠.

일단 6월 회의에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동의하는 단체들을 모아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준비했다고 최한묵 대통령실 경호처장도 운영위원회 답변을 통해 시인했다.”]

군대를 도심에 불러들이는 것은 전쟁이나 계엄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꼴이다.

역설이게도 이는 이명박이 G20 정상회의에 대한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엄포를 놔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에 주눅들지 말고 G20 대응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G20 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장호중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과 마르크스주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사회포럼

서울 동부 사회포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 — ‘삼성 공화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연사: 이종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전지운 (레프트21) 기자

일시: 5월 26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5백 원)

문의: 02-447-0397, 010-9372-2746

서울 남부 사회포럼

마르크스주의와 생태 — 자본주의,

사회주의, 지구의 미래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코차밤바 세계기후민중회의 참가)

일시: 5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00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투기꾼 vs 평범한 사람들 — 유럽 경제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 저항

연사: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일시: 5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서울 서부 사회포럼

천안함 사고와 안보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연사: 전지운 (레프트21) 기자)

일시: 6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010-7214-1157

경기 남부 사회포럼

경제 위기 시대, 복지 국가의 정치경제학

연사: 김문성 (레프트21) 기자)

일시: 5월 28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역 지하상가 2번 출구 먹지골목 지나서 농협4거리 왼쪽 ‘도방’ 건물)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세상을 거꾸로 보는 청소년 토론회실 “물구나무” 세번째 이야기

경쟁 없는 교육은 가능할까?

연사: 송재혁 샘 (현 중학교 교사)

일시: 6월 12일 (토)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웹사이트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간식과 토론준비 비용)

문의: 010-8827-0319

독일 지방선거 현지 리포트

좌파당의 선거 도전이 성공하다

지난 5월 10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선거에서 집권 기민당과 자민당 보수연합 정부가 참패했다.

이곳은 독일 지방정부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독일 공업의 중심지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작은 총선이라고 불렸다.

이번 선거는 독일 사회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최대 패배자인 기민당은 지난 선거보다 득표율이 10퍼센트 넘게 줄어 34.5퍼센트를 기록했다. 기민-자민당 연정의 패배는 보수연정에 환멸과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메르켈이 이끄는 집권연정은 이번 선거를 의식해 부자 세금 감면, 의료보험 개악 같은 정책의 실시를 연기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메르켈 정부가 그리스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 대응에 무능했던 것도 패배를 부채질했다.

메르켈 정부는 처음에는 '무책임한 그리스인'들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버티다가 그 불뚱이 독일과 유럽 전체로 확대될 것이 명백해지자 황급히 태도를 바꿔 금융 지원에 나섰다.

피죄죄하던 사민당은 기민당의 몰락으로 연정 구성 우선권이라는 어부지리를 얻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34.4퍼센트 밖에 안 돼 지난 선거보다 오히려 2.6퍼센트 하락했다.

전통적으로 사민당 강세 지역이던 이곳에서 사민당은 2005년 처음으로 정권을 잃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은 2005년 선거 때 얻은 표에서 38만 표나 잃어 역대 최저 지지를 받았다. 사민



연정 총력 재편

5월 15~16일 좌파당 전당대회 좌파당은 독일 최대주 지방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해 독일 정치 체제를 완전한 5당 체제로 재편했다.

당은 단지 기민당보다 덜 크게 패배했을 뿐이다.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녹색당과 급진좌파 정당인 좌파당(디링케)이다.

녹색당은 12.1퍼센트를 얻었고 좌파당도 5.6퍼센트를 얻어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두 정당 모두 지지율이 갑절로 올랐다.

녹색당은 주로 기민당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의 표를 얻었다.

좌파당은 이번 선거 결과 16개 주 지방정부·의회 중 열 네 곳에 진출하게 돼

독일 정치 체제를 완전한 5당 체제로 재편했다.

좌파당은 실업자들(15퍼센트 지지)과 노동자들(9퍼센트 지지) 사이에서 지지율이 크게 성장했다. 보수언론과 정당들이 계속 악선동을 퍼부으며 견제를 했는 데도 이룬 쾌거다.

연정 문제

좌파당은 복지 삭감 반대, 대학 등록금 도입 반대, 공무원 감축 등 공공지출 삭감 반대, 부자와 기업에 과세 확대 등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벌였다.

투표일인 5월 10일에도 좌파당은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서 6월 12일 열리는 그리스 노동자 투쟁 연대 집회 참가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좌파당의 성공은 많은 독일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반대해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정치 대안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금 이 순간 주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사민당-녹색당 연

정만으로는 의석의 50퍼센트를 넘길 수 없어 주 정부 구성이 불가능하자 좌파당에게 연정 협상 제의가 들어왔다.

사민당과 좌파당의 연정 문제는 독일 좌파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다.

좌파당에 지지를 보낸 많은 노동자들이 보수연합의 재집권을 막고자 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돈이 들지 않는 진정한 개혁'을 말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포함한 대다수 독일 주 정부들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세금은 덜 걷히고 실업 증가로 복지 지출은 늘는데, 무엇보다 금융 구제 등 자본주의를 살리려고 막대한 돈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사민당 주지사 후보는 그래서 좌파당의 강령이 '정부 정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공격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집권 하더라도 공공지출 삭감 정책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좌파당 내 혁명적 사회주의자 그룹 '마르크스21'은 만약 좌파당이 사민당과 연정을 꾸린다면 '얼마나 더 복지에 투자할 것인지는 협상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더 삭감할지, 얼마나 해고할지는 절대 협상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급진좌파의 성공은 이렇듯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을 낳고 있다. 좌파당의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정부 참여로 가능할까? 성공은 새로운 논쟁과 도전도 함께 제기한다.

최용찬

일본 오키나와 기지 이전 요구 투쟁

궁지에 몰린 하토야마 정권

일본 오키나와 현(縣)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로 일본이 술렁이고 있다.

5월 16일 노동자와 학생, 시민 1만 7천 명이 후텐마 기지 주변 13킬로미터를 '인간 띠'로 에워싸는 '5·16 후텐마 기지 포위 행동'을 했다.

전날에는 오키나와의 일본 본토 반환 38년을 맞아 오키나와 현 각지에서 5천여 명이 '5·15 평화행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후텐마 기지의 '국외 이전, 못해도 현외 전면 이전'을 내걸고 당선한 하토야마는 5월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해 국외·현외로 전면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일 미군의 군사적 역지력 유지와 미일동맹을 위해 후텐마 기지 이전은 불가능하다면서 말이다.

오키나와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북한, 동남아시아를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미국이 순순히 후텐마 기지의 국외·현외 이전안을 받을 리 만무하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안(헤노코 해안)을 매립해 기지를 이전하는 안대로 추진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넣어 왔다.

'못해도 현외', '노력하고 있다', '반드시 5월 내 타결' 같은 하토야마의 말에 오키나와 주민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한때 기대를 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이 현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토야마가 제시한 '복안'은 후텐마 기

지를 오키나와 현 나고 시(市)에 있는 헤노코의 캠프 슈워브로 이전하되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말뚝을 박아 활주로를 건설하고('잔고 방식'), 헬리콥터 부대 등 일부를 가고시마 현 토쿠노섬(토쿠노시마)으로 이전하는 '분리 이전안'이다.

미국과 오키나와 주민, 환경 단체 등의 눈치를 보며 낸 구차한 안이다.

그러나 이 안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연립내각의 파트너인 사민당이 기지를 현내로 이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각의 결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집권 시절에 '헤노코 안'을 결정한 자민당도 들끓는 민심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자신도 기지 이전 문제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까 노심조사하고 있다.

지금 하토야마 정권은 후텐마 기지 문제뿐 아니라 오자와의 부패 스캔들,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 양극화, 대중의 불만에 직면해 있다.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은 21퍼센트로, 지난달 이후 4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구차한

〈아사히신문〉(5월 16일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후텐마 기지의 현내 이전은 약속 위반(61퍼센트)이라고 보며 분리 이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62퍼센트). 이 문제를 약속대로 5월 안에 타결하지 못할 경우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답변도 43퍼센트나 된다.

무엇보다 오키나와 주민들과 본토 노동자 대중의 저항이 거세다. 지난 1월에는 헤

노코가 포함된 나고 시 시장 선거에서 기지 현내 이전 반대를 내건 후보가 시장에 당선했다.

이런 분위기가 운동으로 조직되고 있다.

오키나와뿐 아니라 동경·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노동운동과 평화운동, 기지 반대 운동, 시민운동이 주축이 돼 연일 항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오키나와에서는 정당·시민단체·노동조합 등 2백81개 단체가 주최한 '미군 후텐마 기지의 조기 폐쇄·반환, 현내 이전 반대, 국외·현외 이전을 요구하는 현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 9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오키나와 현민이 기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지는 필요 없다', '후텐마의 무조건 반환'을 외쳤다.

5월 1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메이데이 집회(도쿄에서만 4만 4천여 명 참가)에서도 노동자들이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오키나와에는 주일 미군의 75퍼센트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키나와 주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패권 유지를 위해 '선택'한 것이다.

한때 미국과 '대등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하토야마 내각도 결국 미군의 군사력을 원한다. 따라서 미·일 협상이나 하토야마의 의지에 기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후텐마 기지 문제뿐 아니라 하토야마 정권에 불만을 품은 다양한 사람들과 운동들을 한데 모아 거대한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최미선

한반도 불안정성 키우는 이명박 정부의 '북풍' 폭주

이명박 정부의 '북풍'이 한반도 정세에도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먼저 군부에서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5백억~6백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군비를 증강한다면 복지나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돌아갈 것이다.

군부는 또 "지금까지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경고방송을 해왔"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교전규칙 운용을 신속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5월 15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오자 한국군은 한 시간도 안 돼 경고 사격을 했다. 다행히 북한 경비정은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긴장

그러나 남북간에 합의도 안 된 NLL을 둘러싸고 국지전이 벌어질 위험은 커졌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보복과 응징도 하려 한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해상 봉쇄,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화 등이 얘기되고 있다.

동해와 서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정밀폭격기, 핵잠수함 등이 참가해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자

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에 미국 정부도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북한 관련 근거 없다'던 초기의 태도와는 달라진 것이다.

국내의 반발도 무릅쓰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등을 해 준 이명박 정부를 도우려는 듯하다. 미일동맹이 빠져거리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관리할 필요성도 컸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는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전선에 발이 묶여서 북미관계의 현상유지를 원하지만 결코 진지하게 북미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북한 핵을 빌미로 이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을 과시할 필요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하며 천안함을 계기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제재 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북 제재가 계속 추진된다면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불안정과 갈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대북 압박에 맞서 추가적 핵·미사일 실험 등에 나서면 긴장은 더 첨예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전지윤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

나는 지난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나를 포함해 〈레프트21〉 지지자 6명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레프트21〉 31호 1면 머릿기사 ‘안보위기는 사기다’를 문제삼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상 검증’ 운운했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경찰 탄압에 당당히 맞섰다. 경찰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두 시간이나 감금하다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우리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 우리가 항의하자 다섯 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꼬박 48시간 동안 유치장 안에 있었다. 그러나 경찰 탄압이 우리를 위축시키지는 못했다. 우리는 5월 10일에도 강남역에서 예정된 거리 판매를 했다.

경찰의 〈레프트21〉 판매 공격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 민주주의 공격의 일부다. 지방선거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레프트21〉과 진보

적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진실과 저항이 두려워서다.

〈레프트21〉은 기업 광고와 정부 후원 없이 발행하는 신문이다. 또, 그 지지자들이 직접 판매하는 신문이다.

큰 돈이 드는 대형 유통망을 이용하기 어려워서만이 아니다. 독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레프트21〉 판매 방식은 진실의 배포망과 저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레프트21〉에서 발견한 진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레프트21〉을 권하자. 정기구독을 제안하자.

김지태



사진 제공 김지태

진실을 말한 죄? 〈레프트21〉 독자들의 사지를 들어 강제 연행하는 경찰

〈레프트21〉을 응원합니다

강남역에서 신문 팔다가 사람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 듣고 씁니다.

‘자본가 만세’, ‘미국 만세’, ‘일본 만세’ 하는 신문이 있다면 ‘노동자 만세’ 하는 신문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인가 봅니다.

국민의 종이 아닌 자본가들의 종이 대통령이 되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부 자본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

다. 힘내세요.

안누리

이 정부가 미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해도 그렇게 점점 더 가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무덤을 파고 있던 생각이 드는군요.

채옥희

언론들은 하나같이 입 다물고 있는데 그래도 〈레프트21〉 같은 신문사가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제발 더 많은 기사를 내 주셔서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이 뺏히는 결과가

없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주유진

솔직히 요즘 경찰만 보면 좀 섬뜩합니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다고 연락책 아니냐고 추궁하고, 심지어 티셔츠에 용산참사 이미지를 프린트했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30분씩이나 포위를 하고, 검은 비닐 안에 양초 종이컵 넣어진 것도 죄가 되는지 방패로 포위한 채 날름 강탈해 가고,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장 앞에서 ‘근조 민주주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뺨다들 어서 길 건너편으로 쫓아내질 않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한다는 이유로 감시와 연행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것 자체가 독재죠.

진정현

이제껏 제대로 된 정권이 얼마나 있었겠나 싶지만, 근래 10여 년간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현 정권은 정말 반성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이런 시국에 그나마 님들과 같이 탄

압에도 굴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실낱같은 희망을 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편한 길을 멀리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최인수

교과서에도 나오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특히 이 정권에서는 우스갯소리일 뿐이지요.

서초경찰서를 지나며 피 흘리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박재일

수많은 팬지들을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짧게 쓰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세요. 저도 하나하나씩 거들겠습니다.

장호준

까딱하면 잡아가는 게 MB씨 특기인가? 힘내십시오. 어차피 각오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힘써 응원하겠습니다. 투표전국! 삼짱지옥!

안성현



‘사랑의 매’는 없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에게 파귀를 맞아서 코피가 난적이 있다.

물론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과하셨지만 난 아직도 왜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간혹 수업중에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당시 유행이었던 ‘007 뽕’의 게임 중 마지막인 ‘뽕’ 소리를 내며 총알~삿을 날렸다.

그러면 떠들던 학생들은 자리에서 쓰러지며 30초 간 취침 모드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다.

전체적으로 너무 떠들면 입으로 “다다다다~”소리를 내며 기관총 삿을 날렸다.

5분 이상 자는 사람이 있으면 회초리를 들기보다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누가 진정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체벌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

교사가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인 것이다

조성봉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아차 사측

내가 일하는 기아차 화성공장은 해군 2함대에서 차로 5분 거리다. 그래서 천안함 장병들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기아차 노무협력팀은 4월 말 〈노사저널〉에서 2함대 사령부에 걸려 있는 애도 현수막 사진과 기아차 공장에 걸려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노동자들이 정치 파업을 한다고 비난했다.

기아차 사측은 장병 46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노동자 투쟁을 비난한 것이다.

이명박이 천안함 장병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애국주의를 선동하는 것과 자본가들이 천안함 장병들의 죽음을 애도하자며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아비한지를 알 수 있다.

김우용

〈레프트21〉은 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를 비판했어야

4월 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예고했던 파업을 줄줄이 연기했다. 그 이유는 천안함 침몰로 사망한 46명을 애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나도 군에 강제 징집돼 역올한 죽음을 당한 청년들을 애도하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심장을 걸고 투쟁하겠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다’며 투쟁을 하자고 호소했지만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없었다. 지방선거에서 MB를 심판하자고 강조했을 뿐이다.

이를 보면 노조 지도부가 지방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파업을 철회한 듯하다.

나도 선거 참여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노동자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는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을 분리시키고 노동자 투쟁을 부르주아 정치에 종속시키는 노조 지도자들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그런데 〈레프트21〉 31호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천안함 사태 초기 이명박이 군두박질치는 지지율을 애국주의 선동으로 만회하려 인간됨을 쓰는 시점에 노조 지도자들의 파업 철회는 이명박의 숨통을 열어 주는 구실을 톡톡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레프트21〉에서 비판 기사가 없었다는 점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우용

구체적 계급 세력 관계와 대중 정서를 고려해야

첫째, 나도 원칙적으로 선거가 노동자 투쟁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 중심주의가 오히려 선거에도 이롭지 못하다고 본다. 대중투쟁이 뒷받침될 때 진보진영의 선거 도전도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의 선거 중심주의를 비판하다 선거와 노동자 투쟁을 대립시키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물론 김우용 독자는 다행히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랬다가는 선거를 통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을 폐퇴시키고 싶어 하는 노동자 대중과 분리될 위험이 있다.

둘째, 천안함 장례를 이유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연기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4월 말에 천안함 침몰로 목숨을 잃은 병사들에 대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었다. 지배자가 아니라 ‘강제 징집된’ ‘청년’들이 애민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런 추모 분위기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 부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자신감과 투지가 높아 투쟁이 분출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실제 민주노총 지도부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기층의 행동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연기하지 말고 ‘그냥 돌파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 계급 세력 관계, 노동자들의 자신감 등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레프트21〉이 최우선시해야 하는 일은 노동자 투쟁의 ‘고(Go)’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애국주의 선동을 폭로하고 그 칼 끝이 노동자 투쟁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레프트21〉 31호는 바로 그 과제에 전념했다.

김인식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지난 호 <레프트21>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회원이 기고한 글(‘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에 대해 같은 단체 회원인 김종명 씨가 반론을 보내 왔다. 그리고 <레프트21> 기자 장호종이 김종명의 반론에 재반론을 썼다. 복지국가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벌어지는 지금 그 실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운동에, 그리고 <레프트21>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대체로 보건의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달해야 할 목표는 대체로 공유한다. 하지만 그 목표의 구체적 상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목표’를 쟁취해야 하는가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데 반해, 그 목표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 과거 학생운동 진영 내에서 소위 ‘정치노선’에 따라 이리저리 조적이 갈라지게 된 것도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장성 강화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난이 운동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좀더 깊어져야 하고 치열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의 글에 대한 비판글을 써야겠다는 것도 서로 의견 차이의 접점을 확인하고 서로가 공유 지점을 넓혀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래도 차이가 나는 지점은 서로가 바라는 방식의 실현을 통해 검증돼야 할 부분일 것이다.

어떻게 재정 확보할 것인가

회기적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에 비판을 하기에 앞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일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국고지원율이 다르더라도)를 유지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확충된 재정이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수가 인상

쓰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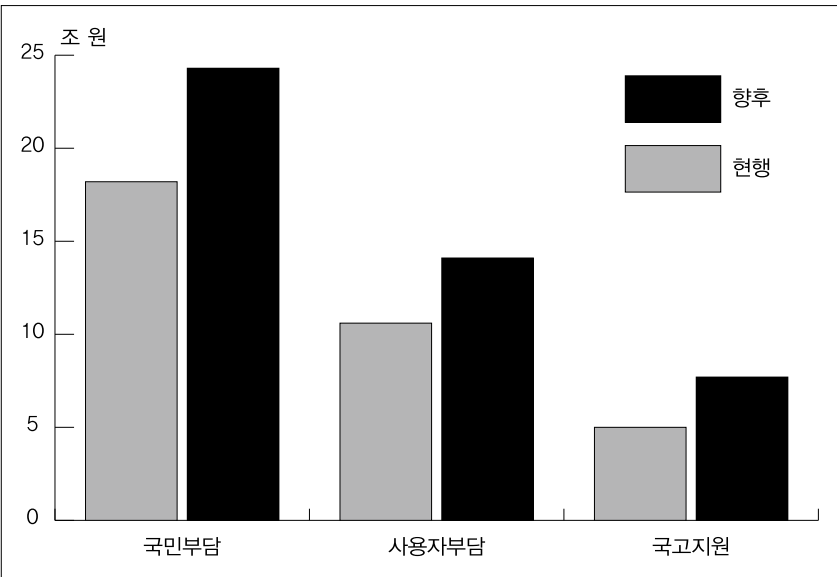
난, 그것이 그냥 우려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그 핵심은 의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다양한 규제 장치를 두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준비하는 모임은 회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 마련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한다. 그런데,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나는 보험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 사용자, 정부의 재정 분담

자료 출처 : <진보사회단체운동 제안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2010.3.16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결과 “개발보다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다. 어느 집이나 아픈 사람 하나쯤 있기 마련이고 절반을 간신히 넘는 건강보험 혜택에 불안과 불만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다.

실제로 지난 5월 14일 <한겨레>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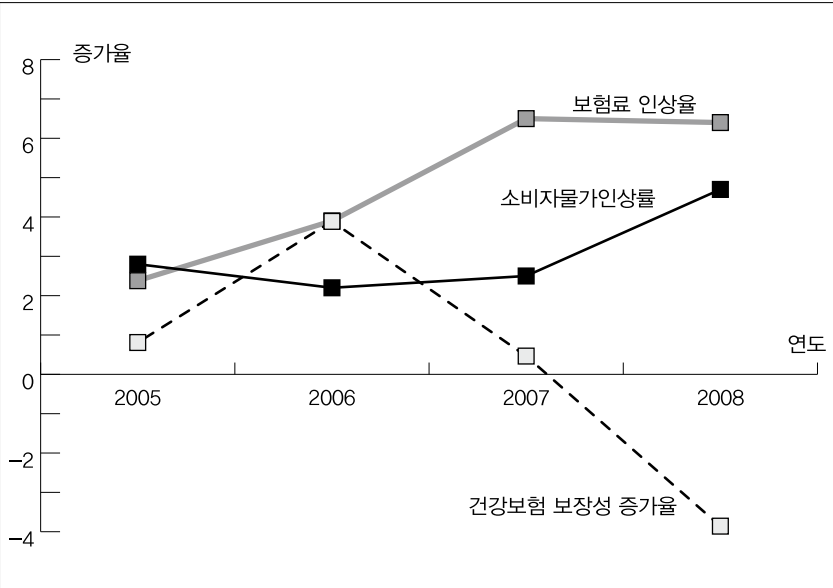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한국에서도 무상의료가 실시된다면 이를 위해 보험료를 조금 더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한국의 다른 복지 제도들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이 보험료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이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복지를 늘릴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이런 여론과는 달리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정부와 기업주들이 보장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증가율

성 확대를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단지 보험자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요 자본가 대다수와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반대한다. 대형 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일부 중소병원들을 제외하면 큰 이견은 없었다.

그래서 해마다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회위원회(건강심)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돼 왔다.

민주노총 등은 보장성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은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 요구들을 충족하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리되면 기업주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기업주들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자들은 두 요구 모두 반대했다. 그러나 비(非) 보건의료 부문 다른 자본가들은 보험료 인상이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엄살을 떨면서도, 실제로는 경쟁 상대인 다른 나라 자본가들보다 그 부담이 훨씬 낮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0.8퍼센트

실제로 이뤄진 일은 정부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잘 보여 줬다.

경제 위기로 보험료 인상에 부담감이 컸던 2008년(2009년 적용분) 한 해를 제외하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큰 폭으로 올랐다.

몇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조차 부담스러워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압류도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건수는 2008년 62만 8천 건에서 지난해 1백2만 8천 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늘어난 수입으로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올려 주면서도 보장성을 확대할 조처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보험료 인상분은 대부분 약값과 수가 인상분으로 새 나갔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도 병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

이 그냥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처럼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감히 대폭적인 수가 인상을 해 줄 수 있을까? 국민들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내서 건강보험을 튼실하게 만들겠다고 팔 건어붙이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와중에?

지금도 친의료계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얼마나 의료계에 잘해 주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명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호주머니 돈을 고스란히 의료계에 퍼주는 일은 못한다(만일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그때는 자본과 한판 싸움에서 국민들이 승리한 이후다). 따라서 우려에 지나지 않는 예상으로 현실의 중요한 운동 과제를 실천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보장성 강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가?

난 이 표현을 보고 좀 놀랐다. 재원을 확충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왜 대형 병원의 마르지 않는 이윤 창출의 샘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자. 대체로 보험수가가 저수가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이나 공공병원, 나름대로 자신의 업무에 착실한 녹색병원 같은 비영리병원과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경영구조의 차이를 보자.

전자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반면, 후자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리면 말짱 도루묵이었다.

올해에도 건강보험료는 4.9퍼센트 올랐지만 “이 중 국민들에게 급여확대 혜택으로 돌아오는 금액은 보험료 인상을 중에서 0.8퍼센트밖에 안 된다. 나머지 4.1퍼센트의 건강보험료 인상액은 수가인상으로 사실상 의료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건강세상네트웍)

게다가 정부는 이미 수백조 원을 금고에 썩히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1백조 원에 이르는 감세 혜택을 준 바 있다.

자본가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복지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의 대가는 노동자 개개인이 떠맡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단지 이명박 정부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본 방향은 다르지 않았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혁’의 핵심은 이처럼 복지 혜택을 줄이고 비용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들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한국의 진보진영과 보건의료운동은 이런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해 왔다.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리고 정부 재정 투자를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조선일보〉식 광우병 “괴담”을 반박한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는 서로 일등이 되기 위해 수백 수천억 원씩을 쏟아 붓는다. 그러고도 많이 남는다. 왜? 비급여 때문이다.

양자의 경영난의 차이는 비급여 영역을 마음대로 창출하고 마음대로 높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병원과 비급여 영역이 제한된 병원간의 차이일 뿐이다. 행위별수가제를 악용한 과잉진료는 보험영역의 저수가를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비급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즐기고 있다.

대형병원의 마르지 않는 돈줄은 보험영역이 아니라 비급여 영역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면 수가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증가돼 오히려 대형병원의 이익 창출 수단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보장성 강화를 하게 되면 대형병원 배불려 줄 것이라는 판단은 커다란 착각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포괄수가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동의하기 어렵다. 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처럼 간편하고 합리적인 제도는 없다. 그것은 마치 동네의원기관에 행위별수가제가 아니라 인두제에 기반한 주치의제도가 훨씬 합리적 지불제도인 것과 같다.

지금도 맹장 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 난다. 이게 이상한 거다. 포괄수가제는 맹장 치료 가격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나는 진보진영이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료 인상? 쿨 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지불 능력만큼 돈을 내고 필요한 만큼 진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제도다.

물론 나는 보장성 강화 운동에 이 방법만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는 않다. 여러 방안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 한국적 보건의료의 현실에서는 가장 유력하고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데 분노해 수백만 국민 대중이 갑자기 길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와 국가를 전복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러나, 역사를 모두 우연에서 찾고 우연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의외로 치밀한 정책과 전술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없이 정치만으로, 또는 정치 없이 정책만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난 진보진영이 그 둘의 변증법적 관계를 이해하고 현실을 바꿔 나가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은 의외로 심각하다. 건강보험을 이 상태로 놔두면 영리병원을 저지해도, 유혈스와 당연지정제 폐지 모두 저지해도 의료는 민영화된다. 이대로 놔두면 건강보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보장성을 현 수준으로라도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민주노총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약속한 조치들 — 재정 지원, 약값 통제 등 — 만 제대로 실행해도 당장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오히려 진보진영이 지난 몇 년 동안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 압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뼈아프게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방향 선회

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회원이나 그가 참여하는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제안 모임’(이하 시민회의)의 제안이 근본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민회의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의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들이 보장성 확대에 동의하도록, 혹은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가 핵심인데 말이다.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 제안은 둘 중 하나로 끝날 공산이 크다.

하나는 정부와 자본가들이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고 4대강 삽질하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

로 ‘보험료 인상’만 받아 챙기고 보장성 확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나쁜 상황이다.

그리되면 보험료 ‘먹튀’의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진보진영 일부에게도 돌아오게 된다. 시민회의의 제안이 가진 치명적 약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두고 벌어지는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말한 보장성 확대 운동의 경험을 시민회의에 참가하는 인사들 대다수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회의는 기왕에 있는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오른쪽으로 분열해 생겨난 단체다. 국가와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이를 강제하는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노동계급의 양보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 말이다.

“국가 전복”은 고사하고 제도 개혁을 요구하던 ‘기존 운동방식’조차 ‘원리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시민회의 측의 주장에서는 지금의 조세제도나 복지제도가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찾아보기 어렵다.

내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면서 시민회의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국민과 소통한답시고 광화문 한복판에 컨테이너 산성을 쌓았던 MB가 2년 만에 새로운 소통 방식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가 짜깁기와 왜곡으로 촛불 2주년 특집 기사를 내보내자 MB는 “좋은 기획을 실어 줘서 감사하다”며 칭찬으로 화답했다. 한나라당도 덩달아서 촛불시위를 ‘사기극’으로 몰아붙였다.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유전자형은 인간광우병(vCJD) 발생에 취약한 MM형이 94퍼센트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을 괴담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렇다면 그 괴담의 진원지는 바로 정부라고 단언한다. 그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겠다.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크로이츠펔트-야콥병 등 인수공통감염증의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용역보고서 339쪽을 보자.

“최근 국내 정상인 529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4%의 사람들이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나타냈음. 이러한 유전자형은 vCJD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유전자형이고,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모든 vCJD 환자의 경우 129번 코돈에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BSE)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국내에서 BSE의 발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뿐만 아니라 CJD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관리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농림부의 《소해면상뇌증의 진단표적물질의 발굴 및 국내에 발견된 CJD 환자의 유전역학연구》라는 용역보고서 13쪽에도 “국내 정상인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 코돈 129번을 조사한 결과 정상인의 95%에서 메치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노출되었을 때 변종 크로이츠펔트제이콥병에 걸릴 확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는 내용이 있다.

그뿐 아니라 농림부의 2007년 9월 11일자 “제2차 전문가 회의자료: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서에서도 “특히, 한국민의 vCJD(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짜깁기

이렇게 정부 자료를 근거로 한 주장을 괴담이라고 우기는 〈조선일보〉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무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대만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가 한창 논란이 되었을 때, 대만의 유명한 과학자 클림킹(金克寧)은 대만 국민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더 광우병에 민감하여,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칼럼을 〈타이페이터임스〉에 기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만 정부와 검찰은 그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체포한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대만의 여당과 야당은 2010년 1월 5일 식품법을 개정하여 미국 소의 내장, 분쇄육, 뇌, 척수, 눈, 머리뼈 등



김민규

5월 1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성의 촛불” 집회 반성해야 할 것은 촛불이 아니라 이명박과 진실을 왜곡하는 조선일보다

6개 위험 부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한편 〈조선일보〉가 괴담이라고 우기는 “광우병 위험물질 0.001그램만으로도 인간광우병에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현재까지 실험적으로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최소량은 0.001그램이다. 영국의 웰스 박사팀은 15마리의 송아지에게 0.001그램의 뇌 조직을 먹인 실험을 한 결과, 그중 1마리에서 광우병 감염을 확인한 바 있다. 감염량이 많을수록 광우병에 걸리는 송아지의 비율이 높았으며, 잠복기도 훨씬 짧았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0.001그램 이하의 용량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낮은 용량으로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통계·확률과 과학적 데이터를 강조하는 일부 학자들은 사람과 소 사이에는 중간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이명박

2년 전 이명박의 사과는 역시 사기극이었다.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전문가위원회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원인물질의 인간에 대한 경구 노출 : 감염량 및 종간 장벽》이라는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과학적 데이터가 상충되고 소와 인간 사이의 종간 장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비록 입수할 수 있는 증거가 현실적으로 종간 장벽 수치가 1보다 훨씬 높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종간 장벽을 1로 간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동물 실험 결과 0.001그램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이 전염된다고 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포함시켜 예방대책을 세우는 의미다.

〈PD수첩〉이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도 이러한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졸속성을 고발하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MB와 한나라당이 쓰레기 수준의 짜깁기와 왜곡으로 가득 찬 〈조선일보〉의 광우병 괴담에 낚인 이유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일방적 소통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MB식 소통 방식은 광화문 한복판에 컨테이너 산성을 쌓아놓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2년 전 촛불의 함성으로 명박산성을 무너뜨린 경험은 2010년 〈조선일보〉의 왜곡과 MB의 일방통행식 소통 방식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 줬다.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헌법과의를 시켜 주자. 진정한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똑똑히 보여 주자.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③

볼리비아의 투쟁, 연속성 그리고 모순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는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에서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때문이며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외쳤다. 아마 전 세계 정부 지도자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도밖에 없을 것 — ‘시장사회주의’를 말하는 중국 정부의 사기꾼들은 제외 — 이다.

그러나 고작 10여 년 전만 해도 볼리비아는 IMF의 모델 국가였다. 1985년 민영화, 복지 삭감, 노동 유연화 등 재앙적 긴축 정책들을 몰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도입했다. 오늘날 유럽연합·IMF와 이명박이 그리스, 유럽, 한국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려는 정책들과 똑같은 정책을 말이다.

이런 ‘충격 요법’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대재앙을 낳았다(경제가 성장하려면 빨리 긴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은 볼리비아의 사례를 똑똑히 봐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기업 도산과 민영화 과정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1952년 혁명의 성과물인 소농들의 토지는 대지주의 수중으로 집중됐고 소농들은 자기 토지를 잃고 떠돌기 시작했다.

2000년대가 되면 정부 공식 통계로도 빈곤 인구가 총인구의 67퍼센트에 이르렀다. 옛 독재 정부 출신 대통령은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래서 15년간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쌓인 울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00년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코차밤바의 ‘물 전쟁’, 2003년과 2005년 연거푸 우파 대통령을 몰아낸 투쟁까지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대중 운동이 가장 급진화한 곳이었다.

코차밤바 투쟁은 2003년과 2005년에 반복될 투쟁 양상 — 거리 시위와 노동자 투쟁의 결합,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의 등장 — 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볼리비아 정부가 코차밤바 주(州)의 물 공급을 벡텔 등 다국적기업에 넘긴 결과, 최저임금이 약 6만 원인 나라에서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에 1만 5천 원에 이르게 됐다.

분노한 지역 주민들, 다양한 시민단체와 조직 노동자가 힘을 모았다. 그들은 ‘물과 삶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을 결성했고, 공개 회의에서 민주적으로 투쟁 과정과 투쟁 방식을 논의하고 결정 사항을 함께 이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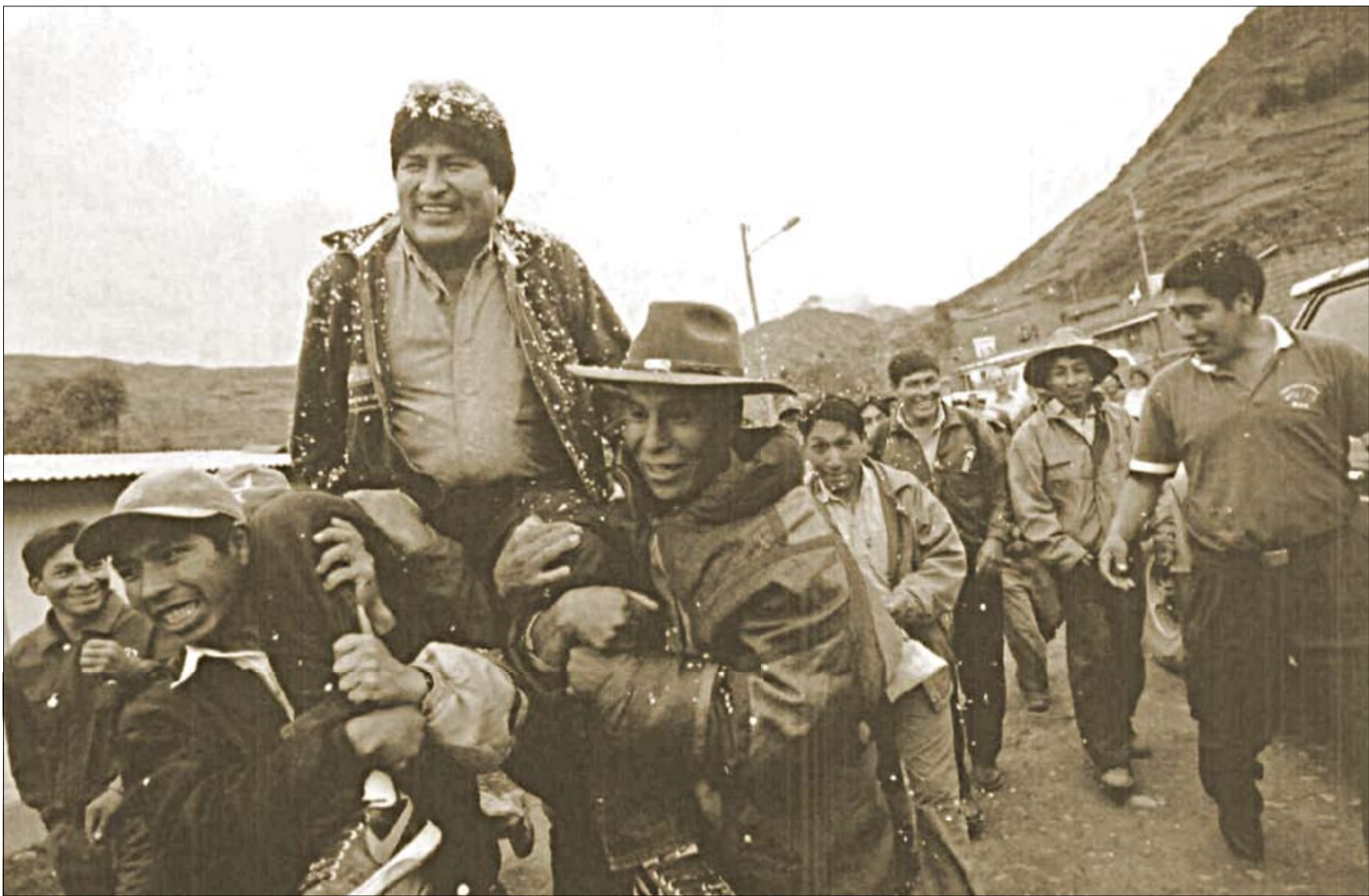
급진화한 주민 대중은 수도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물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했다. 그들은 주요 도로를 점거했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민영화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민중회의

2003년 우파 정부를 몰아낸 투쟁의 직접적 원인은 볼리비아 천연가스를 미국과 멕시코에 수출한다는 정부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 석유 다국적기업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천연자원 추가 민영화의 전초전이나 다름없었다.

대중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돈이 없어 가스를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가스를 수출한다. 가스를 수출한 돈은 다국적기업이 가져간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가스 수출인가?” 대중은 거리로 나섰다.

2003년 9월 19일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해 세 명이 사망했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코차밤바 ‘물 전쟁’에서 일어났



에보 모랄레스는 2005년 혁명적 투쟁의 물결 덕분에 집권할 수 있었다.

던 일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수도 라파스에서는 ‘민중회의’가 열렸다.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의원 수천 명이 모여 공동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결정된 사항을 라디오를 통해 알리고 자기 지역에 돌아가 투쟁을 조직했다. 민중회의는 투쟁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볼리비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공통 요구를 작성했다. 민중회의는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 사회의 모습을 훑듯 보여 줬다.

시민들과 농민단체는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가 물류를 마비시켰다. 볼리비아 전략 산업 중 하나인 광업에서는 전투적인 볼리비아노총(COB)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모든 광물 채굴이 즉각 중단됐다.

구체제 인물인 메사는 민영화 중단, 재국유화, 복지 확대, 토지 재분배를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메사는 “만약 내가 여러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를 쫓아내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메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사람들은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

메사 정부를 몰아낸 2005년 5~6월 투쟁은 볼리비아 민중 항쟁의 정점이었다. 민중회의가 훨씬 더 큰 규모로 등장했다. 6월 8일, 항쟁의 심장부인 엘알토에서 최초로 전국적 민중회의가 열렸다. 당시 민중회의는 사실상 대안 정부 구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올 5월초 모랄레스 정부에 대규모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동조합 시위대 — 모랄레스의 온건한 개혁과 기층의 기대가 충돌한 사례

기존 국가 기구는 무기력해졌다. 평범한 사병과 말단 경찰 들은 시위대를 향해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다.

이런 급진화 분위기에 힘입어 원주민 농민 운동 지도자이자 좌파 정당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AS)’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가 2005년 12월 볼리비아 선거 사상 최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모랄레스는 자신의 집권 동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기층 투쟁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운동은 MAS보다 훨씬 급진적인 좌파 조직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기회를 준 이 운동의 힘과 좌파들의 반자본주의적 사상을 의식했다.

그래서 2006년 5월 1일 천연가스 생산설비 재국유화, 무토지 농민을 위한 토지 개혁, 모든 농민을 상대로 노령연금 지급 등을 실행했다. 또 이번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원주민, 볼리비아와 남반구의 고통을 낳은 악이 바로 자본주의 그 자체임을 폭로하고 사회주의적 해결책을 주장했다.

모순

그러나 모랄레스와 MAS는 기층 운동과 좌파만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볼리비아의 기존 세력들 즉, 기업주·대지주·해외 자본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기존 국가 기구의 관료들을 의식한다.

이것은 MAS의 정치와 그것을 실현

하는 수단이 낳은 결과다. MAS는 선거를 통해 기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체제 내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MAS는 개혁을 요구하는 기층 운동에 호의적이지만 이 운동이 2003년과 2005년처럼 체제를 뛰어넘으려 할 때는 거리를 뒀다.

그러나 기존 체제 내에서 국가 기구를 이용해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엄청난 긴장과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다. 모랄레스 정부의 말과 행동 모두에서 모순을 볼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초 모랄레스는 “자본주의가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직전에 부통령 가르시아 리네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수천 번이라도 강조할 것이다. 모랄레스 정부는 사유재산 … 건강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인간의 교육·보건 분야 참여를 환원한다.”

불행히도 모랄레스 정부의 실천은 종종 전자의 발언보다는 후자에 가까웠다. 재정흑자 창출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 결과로 복지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이 대중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제한됐다.

또, 사유재산권에 대한 도전을 뜻하는 모랄레스의 가장 급진적 정책인 자원 국유화 문제에서도 모순을 볼 수 있다. 그는 천연가스 자원을 국유화했지만 천연자원을 둘러싼 국내외 민간 기업의 합작과 투자를 고무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과 중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LG상사도 리튬 채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모랄레스와 MAS는 두 번의 혁명으로 창출된 유리한 세력균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됐던 우익들은 천연자원이 집중 매장돼 있는 부유한 동부 ‘반(半)달’ 지역의 우파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치권 확대를 내세워 볼리비아의 자원과 부를 독식한 기존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모랄레스를 좌절시키고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예컨

대, 2008년 우파 청년 행동 대원들이 모랄레스 지지 농민들을 기습해 수십 명이 죽고 다쳤다.

볼리비아 노동자·민중은 우익의 도전에 끈질기게 맞서 싸웠고, 그 덕분에 지난해 12월 모랄레스는 우익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재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층 대중과 좌파는 우익에게 빌미를 준 모랄레스 정부의 모순에 때때로 불만을 표실했다.

예컨대, 올해 4월 지방선거에서 MAS는 전국 평균 51퍼센트를 득표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적은 표였다. 5월 초에는 볼리비아노총(COB)이 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현재 볼리비아는 결보기에는 2008년 시작된 세계적 경제 위기의 타격을 덜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 볼리비아산 천연자원 수입이 다시 늘고, 엄청난 유동 자금이 천연자원 투기에 몰리며 볼리비아 주요 수출물들의 가격이 빠르게 회복된 덕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해 볼리비아의 모순과 갈등은 앞으로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모랄레스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 되면 2003년이나 2005년처럼 기층 운동이 다시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돌아보면, 2003년 10월과 2005년 6월 민중회의가 구성되고 노동자·농민의 힘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볼리비아 국가관료·기업주·대지주의 권력 기반 — 기존의 보수적 국가 관료 기구와 사회의 부 — 을 기층 대중이 통제하는 것으로 바뀔어야 했다. 그랬다면 민중이 요구하고 모랄레스가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실현하기 훨씬 더 수월한 조건이 마련됐을 것이다.

우익의 공격 앞에서 모랄레스 정부의 개혁 정책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분출할 볼리비아의 새로운 변혁적 기층 투쟁은 2003년과 2005년에 훑듯 보여 주고 가지는 않았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용욱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5월 31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타이 대사관 앞 기자회견

“타이 정부는 학살을 중단하라!”



전미영 기자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타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울려 퍼졌다.

5월 19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타이 정부의 민주화 요구 시위대 학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주한 타이 대사관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다함께, 인권연대, 대학생나눔문화, 외국어대학교 동아어대 학생회, 국제민주연대, 평화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들 30여 명이 참가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타이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권을 원하고 있다. 타이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자유로운 총선거로 의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함께 국제연락팀 박준규 씨는 “한국 일부언론(YTN, SBS)에서 타이 국민들이 마치 부패한 탁신의 폭주각시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민주주의와 자주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하며, “타이 민중은 현재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고 한국의 단체들이 뜻 깊은 연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 사회주의자 자일스 자이 웅파콘의 연대 메시지도 발표됐다. “타이와 한국의 민중은 군부의 탄압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살 중단과 군대 철수”를 외쳤고 타이 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담당자가 ‘공당’으로서 다른 나라 내정간섭은 안 된다고 기자회견에 함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이재환

이주노동자

“이명박 정부는 인종차별주의에 감염됐다”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G20의 제물로 삼고 있다. 법무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고,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전국에서 벌인다.

5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여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미셀은 “다시 한 번 탄압이, 부상이, 죽음이 예고되고 있다. 전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명박 정부도 감염된 인종차별주의라는 질병은 전쟁과 파병을 정당화하고, 단속 추방과 사장들의 탐욕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또 이주노동자를 “기계나 화장실 휴지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최근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정정훈 변호사는 “기존의 인권침해적 관행들을 합법적 포장지로 감싸는 것”에 불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마치 “길거리에 똥을 싸고, 그것을 신문지로 덮어두어 악취가 진동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 인종차별주의자 5월 14일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주노조 이정원 활동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실체가 5월 3일 광화문 몽골 타운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단속에서 드러났다”고 얘기했다. 그날, 한 몽골 유학생은 영장도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들이닥친 남성 6명에게 강제 연행됐다. 그는 풀려날 때까지 사과논커닝 어떤 해명도 듣지 못했다.

그 유학생은 출입국 관리소에 잡혀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수갑을 차고, 뭍지도 알 수 없는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명박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데,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이 바로 그 출발이다. 정부가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

소은화

5·18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2천여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 규탄하다

지난 5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노동자와 학생 2천여 명이 모여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성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며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개최한 이날 집회는 진보진영

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또, 정부의 사진 채증과 징계 위협을 뚫고 참가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학생들의 방어를 받으며 결의대회를 성사시켰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 날치기 타임오프제 원천무효, 반민주적 탄압 반대, 이명박 심판을 외

쳤다.

광주항쟁 30주년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충분히 활용해 더 커다란 대중 집회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집회였다.

최영준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이 학교의 양보를 끌어내다

석 달 넘게 이어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학사제도 개선 투쟁이 5월 14일 마무리 됐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 본관 점거농성, 실천단의 홍보활동, 1천 70명이 참가한 학생총회, 90퍼센트 이상 찬성한 학사제도 개선안 찬반총투표, 단식농성과 집회까지. 학생들은 꾸준히

투쟁해 왔다.

학교 당국은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면담 자리에서 총장에게 여러 약속들을 받아 냈다.

이중전공과 전공심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었다. 졸업시험 중 외대가 만든 영어 인증시험을 토의·토표 시험으로 대

체할 수 있게 했고, 재학생의 외국어 인증 시험 응시료를 3회까지 무료로 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분은 가계곤란 장학금 확충등에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투쟁 끝에 여러 약속들을 받아 내면서 많은 학생들이 대체로 성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권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MBC

노조 지도부가 선거 압력에 밀려 불필요한 후퇴를 하다

MBC 노동자들의 파업이 39일 만에 끝났다. 노조 지도부의 파업 중단 제안에 상당수 노동자가 격렬히 반발하기도 했지만 결국 파업은 종료됐다.

사실, 아무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파업 중단 결정은 MBC 투쟁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했다.

더구나 지도부 스스로도 “파업 이상 열기”라며 놀랄 정도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 열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단호한 투쟁 덕분에 상당수 비조합원을 비롯해 보직 간부들까지 파업을 지지했다. 전체 사원 가운데 80퍼센트가 넘

는 사람이 이름을 밝히고 김재철 퇴진을 요구했다. 파업 지지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모였다.

그래서 갑작스런 파업 중단은 더욱 아쉽다. 힘이 가장 크고 사기가 높을 때 파업을 접는 것은 사측에게 공격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다.

MBC 파업은 명백히 ‘큰집’과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MBC 노조 집행부는 전선을 확대해 더 큰 투쟁으로 나가길 꺼렸다. 파업 중임에도 노동자 1만 명 이상이 모인 노동절 집회에 조합원을 동원하지 않았고,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할 기회를 놓쳤다. 덕분에 별다른 연대를 조직하지 않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게도 면죄부를 줬다.

현업으로 복귀해 선거 쟁점을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파업 종료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투쟁을 자제하고 투표로 심판하자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온건한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지도부에게 파업 종료를 권했다. 선거에 목매달며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러나 2002년·2004년 선거가 보여 주듯 대중투쟁이야말로 사회 분위기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우파 후보에게 타격을 가한다.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항의 투쟁과 탄핵 반대 투쟁은 그런 구실을 했다.

파업은 끝났지만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시도는 결코 끝난 게 아니다. 당장 복귀하자마자 파업에 참가한 권순표 <뉴스데스크> 앵커가 교체됐고, 노조 지도부 징계도 예정돼 있다. 김우룡 후임으로 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구조조정 전문가다.

결국 MBC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이럴 때 다시 지도부가 주춤 거린다면 현장 조합원의 힘과 정치적 자신감이 중요할 것이다. 파업 중단에 반발해 나흘 동안 열린 총회에서 MBC 노동자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박건희

공공노조

따뜻한 밥 먹고 씻을 권리

지난 3월 공공노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밥 먹을 공간과 설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미화·간병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떠올랐다.

반갑게도, 이 캠페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등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확보와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바꾸고 개선해야 할 것들은 산적해 있다.

공공노조 등은 4월부터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씻을 권리’ 캠페인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청결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옷과 몸 곳곳에서 버스터미널 화장실 변기보다 6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노동자들의 77퍼센트가 샤워장조차 없는 곳에서 일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심지어 67퍼센트는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퇴근한다.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다. “식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씻을 곳은 있나요?”

공공노조 등은 6월 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소 노동자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권리를 찾기 위한 청소 노동자들의 당당한 행진에 응원을 보내자.

심신혜 공공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부지부장

철도노조

뒤로 미뤄진 정면 대결

5월 12일 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가 파업 예정 2시간을 앞두고 잠정안에 합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양보교섭으로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피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에서 각종 복지·수당·휴일 등을 양보했고, 노조 활동 축소와 쟁의시 대체인력 투입 문제 등에서도 후퇴했다. 특히,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보호 조항 삭제에 타협했다. 이에 항의해 노조의 일부 비정규직 담당 간부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측도 원하는 바를 모두 관철하지는 못했다. ‘비연고지로 전환배치’ 등 인위적 구조조정을 관철하지 못했고, 승진제 개악과 연봉제·임금피크제 도입 등도 밀어붙이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 초점을 형성할까 봐 정부도 신경쓰였던 것이다.

아쉽게도 노조가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일자리를 위협하는 공격은 일단 막아내며 정면 충돌은 뒤로 미뤄졌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씁쓸하고 착잡한 반응을 토로했지만, 고용을 일단 지켰다는 안도감도 동시에 내비쳤다. 이것은 커췌이 쌓인 불만 속에서도 선포 투쟁에서 정부와 격돌할 만큼의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충돌은 잠시 봉합됐을 뿐이고 노동자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다.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인력감축 계획 때문에 조만간 본격적인 공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하반기에 실질적인 구조조정 공세와 임금피크제 및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이 예상”(백남희 선전국장)되므로 투쟁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설

“일자리 창출, 물 부족, 수질개선, 홍수 예방은 모두 땀”

《강은 살아 있다》(황소걸음)의 저자 최병성 목사가 정부의 4대강 거짓말을 조목조목 폭로한다.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강연 할 때마다 땀투기를 한 봉지씩 사서 나눠 주면서 4대강 영상도 보여 주고 해야겠다. 일자리 창출 땀, 물 부족도 땀, 수질개선도 땀, 홍수 예방도 땀.”

재치 있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최병성 목사는 4대강 홍보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사업 근거가 일종의 예언이라고 비꼬았다.

“우리 강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오염된 강이라며 죽은 물고기가 있는 강변을 보여 주는데 글쎄 그 사진이 미국 두와미시 강이라는 거죠. 그걸 한국인 양 보여 준 겁니다.”

“홍보 동영상에서 보여 준 것이 우리 강의 현실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나타날 썩은 물, 죽은 물고기, 습지 파괴를 예언처럼 영상으로 보여 준 거죠.”

자연습지가 없다고 하지만 환경부조차도 1백7개나 되는 자연습지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을 정도로 명백한 거짓말이다.

최병성 목사는 이어 4대강 사업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파괴하는 재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사업 예산을 위해 복지비를 삭감했고 공기업을 수자원 공사에 공사비용 8조 2천억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 대가로 수자원공사는 친수(親水)구역 특별법을 통해 양안(兩岸) 2킬로미터 개발권을 행사하고 둔벌이에 나서게 됐는데, 최 목사는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이제 땅이나 집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건데, 만약 수자원공사가 부도라도 나는 날엔 공적 자금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 세금만 퍼붓게 되는 거죠. 더구나 양안 개발은 수질 개선은커녕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어요.”

“민주당도 4대강 반대 진정성 없어”

최병성 목사는 이명박의 청계천 사업 전력에서 익히 드러났듯이 문화 유산에 초연한 사업 진행은 강변의 선사유적지나 문화유산을 파괴할 것이 뻔하다고 한탄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36만 개 늘린다고 했지만 현재 4대강 사업으로 고용된 사람은 1만 명을 겨우 넘어섰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일터를 잃는 골재채취 노동자나 2만 5천 농민의 절반도 안 된다.

게다가 “24시간 새벽 밤낮으로 일이 강행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과로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최 목사는 공사 자체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을 뒤집고 있어요. 정부는 흙탕물이라든 침전되면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공사 속도는 침전할 시간을 주지 않죠.”

“그런데 지금 공사중에 분유하는 물질들은 질량에 비해 부피가 커요. 이게 가라앉으려면 10년에서 2백 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부산 취수원을 264킬로미터나 떨어진 진주로 옮기는 것은 정부도 4대강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 목사는 민주당도 4대강 반대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4대강 막아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상강 사업을 지지하는 후보를 공천 주지 말아야죠.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는 경인운하를 찬성한 송영길 의원을 공천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세균 대표는] 지난주 새만금 준공식에서 MB 옆에 있었어요. 지난해 4대강 예산 통과할 때 막아야지 뭣집 지고만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4대강 사업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파괴하는 재앙이라고 말한다.

있었잖아요.

“노무현도 후보 시절에는 새만금 사업 반대한다더니 집권 후 사업을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노무현도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인 업보가 있어요.”

이어 최 목사는 4대강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활동가 세 명을 고소한 선관위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제시한 대국민 토론회도 공사강행을 위한 명분살기

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 반대 사진, 서명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장 4대강 공사부터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정리 김세원

4대강 사업은 “죽음의 공사”

5월 4일 낙동강 33공구 상주보에서 덤프트럭 운전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연말까지 공사를 60퍼센트 진척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다투달이 낡은 비극이다.

지난 3월 과적 차량 전복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의 죽음을 부르는 신속파괴 막무가내 공사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밤낮없이 일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안동까지 차가 쭉 늘어서 있다고 보면 돼요.”

대구경북 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은 많은 비가 내린 5월 18일에도 낙동강 4대강 공사 현장은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덤프트럭은 괴물 덤프[락덤프]라고 40여 톤 용량의 대형 장비예요. 수입 장비죠. 이 차는 내부에 완충장치가 없어서 운전자가 상당히 피

곤해요.

“그런데 이 분은 3개월 전 공사에 투입된 이후 하루도 안 쉬고 명절날도 없이 일했다는 거죠. 집에도 한 번밖에 못 가고 하루 12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뒤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죽음의 공사는 강행됐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삼호건설은 그 노동자가 쓰러진 다음날에도 야근하라고 했어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장비개조와 과적은 물론이고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현장에 가면 중간업체가 다 있어요. 암암리에 배치비 명목으로 하루 1만 원에서 3만 원씩, 월 단위로 몇십만 원씩 갈취하고 있어요. 이게 다 불법이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폭로했듯이, 국토해양부는 정부 각 부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현장 감독을 최소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송 지부장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은 이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 현장에 들어가 있는 대형장비를 가진 사람은 정말 소수일 뿐이에요. 그러니 진짜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알바 늘리면 그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잖아요.”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 국토해양부에서 한두 명씩 나와 있고 국정원 직원도 감시하러 나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일하는 사람보다 시공사랑 정부 직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준설장비 중간 이름새에 ‘구리스[윤

활유]를 치는데 마모가 많아서 자주 쳐야 돼요. 꼭 현장이 정비공장 같죠. 기름 칠한 채 물 속에 그냥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기름 칠한 것의 절반은 그냥 물에 떠 내려가요. 방지막 친다는 데 별 효과가 없죠.”

노동조합은 지난 4월 건설노조 파업 준비 기간 중에 4대강 건설 현장에서 파업 투쟁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낙동강 공사 현장 군부대 투입은 4대강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선전이 순전한 거짓말임을 보여 준다. 오히려 지난 5월 8일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골재 노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3보 1배 시위를 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복지·환경 친화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김세원



존 벨라미 포스터는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현실문화연구, 2001)와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책갈피, 2007), 《마르크스의 생태학: 유물론과 자연》(국내 미출간, 2000) 등에서 마르크스 관점에 입각해 환경 문제를 탁월하게 분석했다.

《생태 혁명》은 그간의 논문과 책들에서 언급한 내용을 총망라해 정리한 책이다.

《생태 혁명》(존 벨라미 포스터, 인간사랑, 440쪽, 1만 9천 원)

생태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1부 “전 지구적 위기”는 생태 위기,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 안에서 정상영업이 유지되는 한, 기술 개발과 환경개혁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난 역사(최초의 유엔기후회의가 시작된 1992년부터 2009년까지)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2부의 주제인 “마르크스의 생태학”은 그간 환경사회학과 생태주의가 마르크스주의를 상대로 제기한 비판과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특히 저자는 마르크스의 생태적 비판의 핵심으로 ‘물질대사 균열’을 주목한다.

저자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후대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마르크스 사후 1940년대까지는 자연주의와 생태주의 개념을 통합해낸 윌리엄 모리스, 칼 카우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부하린, 바빌로프 등이 그 전통을 계승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스탈린주의가 소비에트 정치 지도자들과 과학계 숙청을 단행하면서 마르크스의 생태학과 관련된 요소들도 함께 제거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치암바

3부 “생태와 혁명”에서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인 생태 혁명을 제안한다.

‘생태 혁명’은 자본축적체계 전체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관계 자체와 인류와 지

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대규모 사회적 변화이다.

전 지구적 생태 재앙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면서 재앙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생태 혁명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저자는 남반구의 진보적인 생태적 변화, 즉 쿠바의 농업 방식과 차베스 정권 하의 베네수엘라의 공동체적 교환(사회주의적 시간 회계방식) 도입, 모랄레스 정권 하의 볼리비아의 사회주의적 흐름 등에서 생태 혁명의 가능성을 찾는다.

2010년 ‘코차밤바 합의’에서도 나타났듯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기후정의 운동은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운동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터가 주장하는 ‘생태 혁명’은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라는 기후정

의 운동의 급진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물론 “현재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정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혁명하는 일이 선행된 자본주의 세계의 생태적 사회적 혁명에 투영되지 않는다면 필수불가결한 전 지구적 생태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

‘고립된 희망의 섬’은 제국주의 전쟁, 계급 전쟁의 거대한 물결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 책은 왜 사회주의자들이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왜 생태주의자들이 ‘생태 혁명’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강사)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호 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여성해방 운동의 주요 쟁점들을 다룬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겨우 14.7퍼센트로 세계 81위다.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겨우 2.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2008년 기준).

이런 심각한 성 불평등 속에 성주류화는 주류 여성단체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성주류화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주로 여성 정치인 · 관료 늘리기, 여성 관련 부서 설치, 성인지 통계 · 예산 작성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도 성주류화 전략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가 창설됐고,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제가 도입됐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여성단체들이 활발하게 성평등 운동을 벌여 온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단체들은 각 정당에 여성할당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진보 · 보수 여성단체들이 함께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를 구성해 ‘지방선거 선출직 30퍼센트 여성 할당’ 권고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 자신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던 한명숙, 상임대표를 지냈던 지은희 씨가 1대, 2대 여성부장관이 됐다.

2003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대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고, 2007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낸 김상희 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페모크라트(여성주의 관료)”라는 말이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 자체를 진보로 여기사 보나, 박근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성들이 좀처럼 고위직에 진출하기 힘든 심각한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장을 우리는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간에 진행된 성주류화 정책조차 후퇴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페모크라트

한편, 진보정당들은 올바르게도 여성할당 요구에 가장 적극 화답해 왔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의 여성 활동가들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 의원들이 자신의 직책을 활용해 투쟁을 고무하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서는 성주류화 전략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백하다. “페모크라트”가 늘어난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여성 대중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여성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임금 불평등도 그대로였다. 양극화가 심화해 빈곤층의 다수를 이루는 여성들이 가장 고통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이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됐지만, 한명숙과 면담하러 간 KTX 여승무원들은 총리실 앞에서 전원 연행됐다. ‘여성주의 장관’은 다들 거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여성단체 리더들이 지금 한명숙을 모범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치켜세우며 무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은 것이다.

정책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성인지 예산 · 통계도 필요하다. 이것은 성차별적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차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집중해야 한다.

여성 대중의 처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여성에게 집안일과 양육을 떠맡기고, 이를 빌미로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턱 없이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여성차별적 체제에 균열을 내야 한다. 이런 체제 속에서 소수의 여성이 꼭 대기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여성차별을 타파할 수 없다. 그 꼭대기에 올라간 여성들이 쉽게 평범한 여성들을 배신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성을 둘러싼 사회관계가 변해야만 여성의 지위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관계를 바꾸는 투쟁에 여성들이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 저항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동참해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투쟁은 여성 · 남성에게 흔히 남아 있는 여성차별적이고 보수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최미진

논설

진보 후보 지지가 이후 저항에도 이롭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름도 안 남은 지방선거의 핵심을 이렇게 본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용산에서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끔찍한 고통 속에 불에 타 죽게 만든 죄, 쌍용차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음식과 물까지 끊긴 생지옥으로 몰아넣은 죄, 4대강에서 생명을 파괴하며 죽음의 삼질을 계속한 죄, 오로지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하여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긴 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가로막으며 공기처럼 소중한 민주주의를 걸레로 만든 죄.

이런 범죄적 정책들이 자행된 지난 2년 반은 빨리 깨어나고 싶은 악몽과도 같았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실정의 반사이익을 얻은 이명박이 승리했지만, 지금은 반이명박 반사이익 덕분에 친노 정치인들이 떠오르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경제 살리기’의 실체와 쓴맛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개발보다 복지에 더 큰 호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4대강 개발에 보내는 지지는 작고 무상급식에 보내는 지지는 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을 뒤집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천안함 폭풍 몰아가기에 애쓰고 있고, 전교조 대 반전교조, 촛불 대 반촛불로 편 가르기에 열심이다. 어차피 잡지도 못할 산토끼들이 도망가더라도 집토끼만은 확실하게 챙겨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 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산토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높은 반감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했다. 사람들은 민주

당을 반이명박의 대안으로 썩 미덥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명박 집권의 예고편이던 민주당 집권 10년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제대로 싸우기보다는 줄곧 타협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한명숙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내며 무상급식을 반대한 장본인이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의료민영화와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한 장본인이다. 지난 연말에도 민주당이 타협하고 방조한 덕분에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과 개악 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었다.

진정한 동력

이명박이 50퍼센트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도 이런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관계 있다. 경제도 회복됐다고 하고, 민주당이 딱히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단 이명박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개혁적으로 여기는 민주당(국민참여당) 후보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라는 차악을 찍어서라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싶다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 민주당과 무비판적인 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의 요구를 낮추는 이런 무비판적 동맹은 계급투쟁의 발목을 잡으며 결국 민주당에게 뒤통수만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이 재앙의 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영국 총선 직후]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영국의 세 주요 정당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훨씬 더 근원적인 권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협상장의 정치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다름아닌 그 유명한 ‘시장’이다. 심지어 이 과정은 총선 이전부터 시작됐다.

선거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총선 투표가 끝나고 3시간 뒤 런던 국제금융선물 옵션 거래소가 개장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이것은 채권(영국 정부 국채) 거래인들이 선거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채권을 사고팔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채권 시장이 바라는 선거 결과는 단 하나였다. 곧, 보수당이 과반 득표로 집권해 전례없는 공공지출 삭감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사실상 시장이 영국 유권자들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권자들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투표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장의 거물들은 두경이 열렸다.

거대 광고회사 최고 경영자인 마틴 소렐경(卿)은 라디오4의 ‘월드 옛 윈’에서 형 의회[과반 득표 정당이 없어 정국이 ‘불안하게 매달려 있다(hung)’는 뜻]는 “정말 최악”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BNP 파riba스의 앨런 클라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불평을 했다. “영국의 공공재정 문제를 즉각 처리할 권위를 가진 과반 득표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 트리플에이 신용등급[최상위 신용등급]을 잃을 수 있다.”

이 모든 소동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지미 카빌이 1993년에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만약 내가 환생할 수 있다면 채권 시장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모든 이를 협박할 수 있다.”

공갈협박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지 기억을 되살려 보자. 3년 전에 은행, 헤지펀드 등은 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불황을 촉발시켰다.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된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트리플에이 등급을 부과해 이 재앙을 낳는데 기여한 신용평가사들을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규탄한 게 엇그제다.

정부들은 1930년대 대공황의 재연을 막으려고 지출을 늘렸다. 그들은 주로 빚을 차입해 쓸 돈을 마련했다. 이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재정적자도 늘었다.

정부 지출과 차입으로 살아남은 은행과 금

로 접어들었다. 부루주아 양당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이라는 대의를 내팽개친 채 민주당 선거운동원들로 전략해 버렸다.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추진하는 진보신당도 비판을 비껴갈 수는 없다.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MBC 노조에게 파업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이 민주당과 동맹하는 데 매달리면서 노동자 투쟁을 자제시키는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반민주 정책들을 막아낼 진정한 동력이다. 민주당과 동맹하려고 이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완전한 본말전도다.

따라서 좌파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독립적 노동자 투쟁을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우선 진보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예컨대 그리스 급진좌파는 지난 대선 때 우파인 신민주당 정부에 맞서 사회당을 지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좌파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정치적 독립성이 지금 사회당 정부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자양분이 됐을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명박이 너무 싫어서 민주당이라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면 한나라당이 패배할 것이다. 이명박이 싫지만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한나라당이 가까스로 패배를 면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이든 이명박 정부와 그 정책에 분노와 반감이 크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선거 후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더 본격화할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다. 따라서 이에 맞선 대중투쟁을 건설한다는 우리의 과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용 기관 들은 이제 재정적자가 범죄 행위라고 되는 듯이 규탄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무지막지하게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공갈협박이 현실에서 어떤 고통을 낳을지 궁금하다면 그리스를 보면 된다. IMF와 유로화 통화 국가들이 ‘구원’의 대가로 제시한 긴축 프로그램은 임금 · 연금 · 공공서비스 삭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의 결과로 그리스 경제는 올해 - 4퍼센트, 내년에 - 2.6퍼센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적자 감축은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란 것이다. 유일한 ‘장점’은 경제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의 이윤을 늘려 그들의 힘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긴축을 요구하면서도 다시 한 번 자기를 구해 달라고 국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최근 <뉴욕 타임스>는 불안감을 이렇게 표시했다. “아테네에서 시작된 두려움이 유럽을 관통하고 나서 마침내 미국의 주식 시장을 강타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합의된 유럽연합 긴급 구제금융은 채권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천한 유권자들과 선출 정치인들 위에 군림하는 신성한 ‘시장’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허약하다.

번역 김용욱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타이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타이 민주화 운동 정당하다

자일스 자이 옴파콘

5월 19일 군부가 무차별 발포로 민주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광범한 타이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방곡과 일부 지역에서 건물들에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다. 관공서, 은행, 주식시장, 고급 쇼핑몰과 친군부 언론들이 불탔다.

이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왜 그런가?

만약 군부 후원을 받는 아피싯 정부가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 실시를 선언하고 발포 중단을 명령하면 '폭력 사태'는 즉각 끝날 것이고 붉은 셔츠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자본주의 민주 국가에서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려고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1970년대 영국 총리 에드워드 히스는 대규모 파업 물결에 직면하자 총선을 실시했다. 1968년 프랑스 정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그랬다.

그러나 아피싯 정부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계엄령을 나라의 4분의 1까지 확대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검열해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정당성을 되찾고 싶다면 총선 실시를 선언해 민중의 바람을 수용하고 자신이 정당성이 있는지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붉은 셔츠 지도자들은 정부에 즉각적인 발포 중단과 협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했다면 학살과 폭력은 중단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부했다.

아피싯과 그의 장군들은 저격수와 압살단을 방곡 시내로 보내 이른바 "실탄 사격 지역"에서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하도록 했다. 4월부터 65명이 죽고 2천 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의료진, 언론인과 10세 소년 한 명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붉은 셔츠가 "무장한 테러리스트"라는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BBC, CNN, ABC 등 많은 언론의 보도는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줬다.

정부는 광범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고



타이 엘리트들은 민주화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에 총으로 응했다.

정부의 검열팀은 페이스북과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타이 정부의 요청으로 타이인들이 올린 시위대 비디오를 삭제했다.

아피싯 정부가 폭력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선거에서 질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선출된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는 2006년 쿠데타 발생부터 타이의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유린한 군부와 사법부의 힘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군부, 대다수의 기업인, 사법부와 고위 관료들 등 타이의 엘리트들은 오랫동안 헌법 외의 권력을 사용해 타이 인구 대다수를 착취하고 억압해 왔다. 그들은 1973년, 1976년, 1992년, 2009년, 그리고 지금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에게 발포했다.

불평등

이것은 계급 전쟁이다. 그러나 계급 전쟁은 단순히 부자와 빈민이 서로 다투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붉은 셔츠는 노동자와 소농 들을 대변한다. 그들은 타이의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혜택을 누리진 못했다. 타이는 불평등이 매우 심한 나라다.

백만장자 탁신 시나와트가 집권 후 국민의료와 기타 친빈민 정책을 실시하자 타이 노동자와 소농 들은 큰 기대를 품었다.

그들은 2006년 타이 엘리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선출된 탁신 정부를 몰아내

자 크게 분노했다. 이제 그들은 굳건하게 타이 지배계급의 무장력에 맞서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붉은 셔츠의 방곡 중심가 점거 투쟁은 정당하다. 비록 그것이 고급 쇼핑가와 특급 호텔의 상업 활동을 방해하더라도 말이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

번역 김용욱

자일스는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뒤 영국으로 망명했다.

양비론은 틀렸다

타이의 영터리 인권 모임들은 "양쪽"이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비무장한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하는 것은 한쪽밖에 없다. 심지어 국경없는기자회도 "양쪽"이 언론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붉은 셔츠가 어떻게 누군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 자신이 살해당하고 있는데.

많은 뉴스는 군대가 '폭도'에게 발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금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군대다. 어떤 언론은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돌변하다"란 표현을 썼는데, 진짜 폭력적인 것은 시위대가 아니다.

비무장한 민주화 시위대가 무차별 살육당하고 있는데 국왕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기 돈을 세는 것 말고 그가 해 온 일이라곤 군대가 저지른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른바 전문가라는 자들은 국왕이 "타이를 통합시켜 왔다"고 말한다. 사실 그는 모든 민주주의 탄압을 지지해 왔다. 그는 무기력하고 배짱도 없다. 그래서 많은 붉은 셔츠가 공화주의자가 된 것이다.

붉은 셔츠 지도자들은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면서 유엔에 중재해 줄 것을 요청

했다. 그러나 유엔은 방금 타이 정부 인사를 유엔인권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세상에! 하지만 솔직히 전쟁광들이 통제하는 기구에 무엇을 바라겠는가.

붉은 셔츠 지도자들이 유엔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타이에 중립적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타이국가인권위, 사법부와 대다수 NGO와 학자들은 정부와 군부를 지지하고 있다.

번역 김용욱

www.marxism.or.kr

10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진보 포럼

맑시즘2010

7.22-25
고려대학교(섬외중)
주최: 다함께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

세계경제 위기와 그에 맞선
저항 소식을 들려줄 해외 연사들



파노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창립자이자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들의 저항



조셉 추나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부
경제 위기는 끝났는가, 이제 막 시작인가

저명한 운동의 리더 · 활동가 ·
명연사들이 온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김진수 《소금꽃나무》의 저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지금! 참가신청하세요 www.marxism.or.kr 02-2271-2395 marxism2010@marxism.or.kr
놀이방 · 문화행사 · 할인 서점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놓칠 수 없다! 대가에게 듣는 명강연



한홍구 《대한민국史》 저자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역사 - 5·18에서 1987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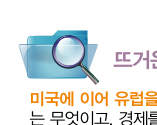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파·현대세계경제론의 비판적 재구성 - 하비, 아리키, 브레너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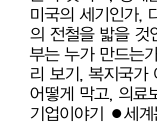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 공간의 정치경제학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내 최초 트로츠키주의자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유전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가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범죄 · 사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

천보선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비교조키와 참교육



뜨거운 현안과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만나는 흥미진진한 포럼들이 더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을 뒤흔든 세계경제 위기 ● 금융 세계화 — 금융의 발전으로 자본주의가 변했는가 ●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이제 끝났는가 ● 케인스주의는 무엇이고, 경제를 구할 수 있는가 ● 민주적 계획경제 — 경제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게 가능한가 ● 변화하는 오늘의 세계 체제 ● 변화하는 세계 체제 — 미국의 세기인가, 다국화된 세기인가 ●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 한국 경제와 대안 ● 한국 경제, 불안정한 회복의 미래 ● 한국 부동산 거품, 미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 발전국가론으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가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 왕초보를 위한 자본론 ● 부는 누가 만드는가 — 자본가인가 노동자인가 ●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 마르크스주의 방법 ● 유물론과 변증법 ● 소의 그 밖에 ● 대선 아젠다 미리 보기, 복지국가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무현과 진보 ● 타이의 위기와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 투쟁 ● 낙태 — 죄인가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 의료 민영화 어떻게 막고, 의료보험 보장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G20의 쟁점과 대응 ● 분단과 한국전쟁 ● 사회적 공헌으로 기업은 선택받는가 — 우리 삶을 망치는 기업인가 ● 세계는 왜 이토록 가난한가? 자신으로 제3세계를 가난에서 구할 수 있을까 ●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 —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레닌의 전략과 전술 ● 유럽의 신파시스트 >>>업데이트되는 연사와 포럼 주제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